

일본의 동아시아 EPA 전략과 시사점

강 철 구
고려대학교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일본의 EPA 전략의 추진배경 현황 | 참고문헌 |
| III. EPA 전략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책 | Abstract |
| IV. 시사점 및 대응 | |

Key words(중심용어): 동아시아 EPA 전략(Japan's EPA Strategy), FTA,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

국 문 요 약

일본은 2006년 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국과 중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EPA(경제연대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구상을 발표하였다. 일본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EPA' 전략이 성공할 경우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인 31억 인구에 전 세계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9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약한 편이어서 일본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 그밖에 동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역사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게다가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타결하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한 경제·사회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신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EPA 전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앞으로 EU, NAFTA에 필적할 만한 동아시아 지역경제권이 형성될 때 주도권을 잡아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세계 교역환경은 2차대전 이후 GATT체제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점차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변하고 있다. 그 중 세계 2극체제의 지역주의라 할 수 있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1994년 발효되면서 지금은 전 미주를 포함하는 34개국의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를 구상하고 있으며, EU(유럽연합)가 2004년 5월 10개국의 신규회원을 받아들이고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새로이 EU에 가입되면서 27개국의 회원을 지닌 경제통합 단계까지 진전되었다.

아시아를 살펴보면 구성국가간에 자유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동아시아의 AFTA(아세안자유무역협정)가 있으나, 세계적인 지역주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지역경제 협력체는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제도적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이를 이끌어갈 추진 주체가 부재한 채로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2006년 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국과 중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EPA'(경제연대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구상을 발표하였고, 이어 2006년 8월 24일 16개국 경제장관 모임에서 이러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EPA' 전략이 성공할 경우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인 31억 인구에 전 세계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9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아베신조(安倍晋三) 전 일본총리는 이에 발맞추어 일본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경제 개방 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대상이 넓고 포괄적인 EP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집권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 주요국인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나라는 'ASEAN+3'(동북아 3개국) 및 'ASEAN+1'이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 역시 'ASEAN+1'을 추진하면서 당분간 'ASEAN+3'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EPA' 전략이 일본의 의도대로 추진될지에 대해서 아직은 냉담한 반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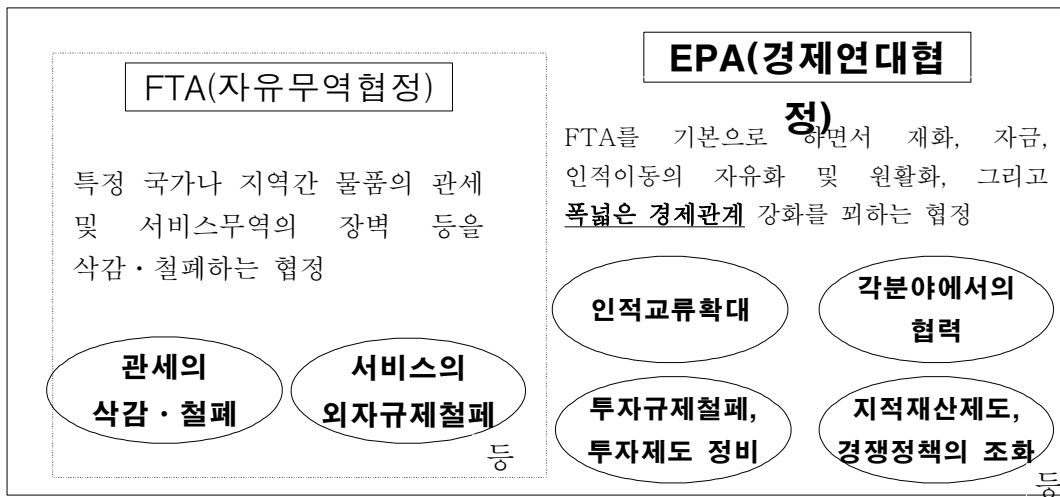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이 추구하고자 하는 EPA는 FTA와 어떻게 다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동아시아 EPA' 전략을 통한 일본의 경제적 편익과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의 EPA 전략에 대한 한국 측의 준비와 향후 한일 FTA 협상에 대한 대응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II. 일본의 EPA전략의 추진배경 현황

1. EPA의 개념 및 의의

FTA(자유무역협정)는 재화의 관세인하, 서비스의 외자규제 등 무역분야에 한정해 특정 국가나 지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삭감·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체결을 협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EPA는 FTA를 축으로 무역 이외에도 경제 거래 및 투자의 활성화, 경제 제도상의 조화와 협력 촉진 등 상대국과의 인적, 물적, 자본의 교류 전반을 규율하는 보다 폭넓은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FTA보다 한 단계 높은 협정을 일컫는다. 즉, FTA는 EPA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며 FTA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림 2-1] FTA와 EPA의 관계



일본은 다자간 협상인 GATT·WTO를 중심으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대외경제정책의 기본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자 간 무역협정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FTA가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 역시 FTA를 추진하는 것이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 무역체제를 보완하고, 무역자유화나 경제 활성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EPA 체결 교섭

1) 현재 일본에서는 FTA 보다 EPA 라는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등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일 FTA’ 혹은 ‘일·멕시코 FTA’ 등으로 표기하지만 일본에서는 상기 FTA 대신 ‘일·한 EPA’ 혹은 EPA/FTA 등으로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서도 EPA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FTA와 EPA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 두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일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제연대협정(EPA)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을 급속히 진행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2) 3)}.

또한 2000년 이후 세계적인 추세인 지역주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면서 관세철폐 등 무역장벽 완화를 중시하는 FTA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뿐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까지를 포괄하는 EPA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한 수출경쟁력 및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FTA보다 EPA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EPA를 체결할 때 민간부문의 개방은 최소화하고 FTA 이외의 이슈를 부각시켜 협상에 임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EPA는 일본 및 상대국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도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촉진하는 등, 정치·외교전략상 일본에게 보다 유익한 국제환경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安倍晋三) 전총리가 EP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략 및 일본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으로 일본 국내의 개방확대와 국제적 현안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아소(麻生太郎) 외무장관은 EPA를 ‘동료만들기’(仲間づくり) 전략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면서 가치관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동료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점점 넓혀간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EPA와 같은 중장기적이고 복잡한 협정을 같이 진행하게 되다 보면 ‘동료’(仲間)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시간이 절약되는 FTA보다는 EPA 교섭이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진경제를 구사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EPA 협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의 대대적인 기술이전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상대국과 호혜호조(互惠互助)의 ‘동료만들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아소(麻生) 외무대신 연설, 2006. 3. 8. 일본기자클럽 연설내용 중).

2. 왜 ‘동아시아 EPA’인가? 추진배경

1) 정치적 배경

세계적인 흐름인 경제블록의 광역화 현상을 살펴보면, EU의 경우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새로 가입되면서 2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NAFTA는 북미뿐만 아

2) “今後の経済連携協定(EPA)の推進についての基本方針”(2004. 12)에는 일본이 추진하고자 하는 EPA는 단독적인 구상이 아니라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무역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3) 일본이 다자주의를 벗어나 EPA/FTA를 추진하게 된 원인을 박변순 외(2003)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① 지역경제통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만이 세계적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일종의 위기감, ② WTO를 둘러싼 상황변화, 즉 이해의 일치가 상대적으로 쉬운 EPA/FTA가 무역정책의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 ③ 외압에 대한 반발, 미국이 주도해 온 WTO체제에 대한 의구심, ④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일본경제와 아시아경제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⑤ 미국을 능가하는 동아시아의 거대시장으로의 부상 등이다.

나라 중남미를 모두 포괄하는 FTAA의 창설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지역만이 EPA/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인 고립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무대에서의 거대 경제권인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 및 ASEAN에 빼앗기지 않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동아시아 EPA’를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이 통산성 주도로 EP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對美관계 환원주의’(American reduction)로 부터 ‘동아시아연대 중심주의’(Asian orientation)로의 포괄적 외교원리라는 가설로 설명이 가능하다(Ogita, 2003). 전후 일본외교는 무역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본의 안전보장을 약속한 미국과의 2국간 관계인 ‘일·미 2국간주의 징후군’(姜, 2003)으로 상징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안전보장 외 외교전반에 걸쳐 일본의무성이 주도적이었고, 일·미 안전보장 조약체제 이외의 국가와 동맹관계를 모색한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일종의 터부시 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대두되고 경제의 글로벌화 및 냉전이 종결됨에 따라 일본외교의 주제가 안전보장에서 경제문제로 상대적 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의 ‘對美관계 환원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역내 경제통합 및 일본국내의 지역주의에 대한 분위기 등으로 경제관청인 통산성의 역할이 강해졌다. 통산성은 처음에는 미국을 포함하는 환태평양지역인 APEC을 염두에 두었으나, 아시아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지역으로 범위를 좁히고 EPA를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표 2-1] 일본외교의 요소의 이동축 (이념형에 의한 가설)

	舊	新
포괄적 외교원리	對美관계 환원주의	동아시아연대 중심주의
외교주제	안전보장	경제
무역정책원리	전일적(專一的) 다국간주의	선택적 2국간주의/지역주의
주도적관청	외무성	通産省/經産省

자료 : Ogita(2003)

어쨌든 일본외무성은 아직도 일본외교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EPA 추진에 있어서도 WTO의 다국간 자유화를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對美관계 환원주의’ 역시 2001년 9. 11 테러 이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쟁 및 이라크전쟁 등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표 2-1>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는 신·구의 관계가 양자택일의 형태는 아니지만, 일본의 포괄적 외교원리가 동아시아를 중요한 무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외교전략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일본은 외교전략상 WTO 중심의 다자주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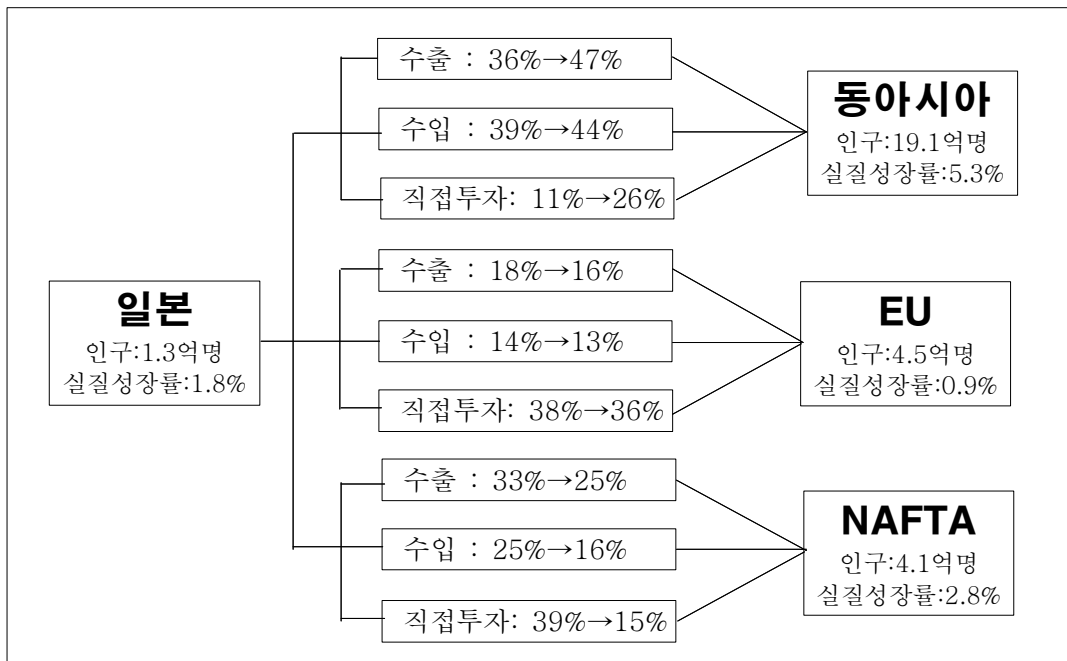
였다. 즉 WTO의 경우 교섭상대국이 너무 많고 협상속도가 느리지만, EPA는 교섭상대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자체제에 비해 협상에 필요한 기간이 짧아 보다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EPA 체결로 정치적 연대와 신뢰를 증진시켜 일본의 국제정치적 파워게임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경제적 배경

일본은 동아시아와 정치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은 바로 ‘동아시아 EPA’ 전략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에 효율적이고 성숙한 시장경제권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동아시아는 일본 무역의 약 40% 이상을 점하고 있으나 의외로 동아시아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서비스·투자면에서도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관세율에서 오는 불이익은 미국이 3.6%, EU가 4.1%인데 비해 중국 10%, 말레이시아가 14.5%, 한국 16.1%, 필리핀 25.6%,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37.5%로 일본상품은 무역액이 가장 많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일본기업들은 기존의 구미 투자 중심 거점을 상당부분 동아시아로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동아시아국가들과 EPA를 체결하는 것이 일본기업의 원활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진창수, 2005).

[그림 2-2] 일본과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



동아시아는 일본을 제외한 아세안10개국, 중국, 한국, 대만, 홍콩의 합계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수출입에 접하는 비율은 1999년에서 2004년의 변화율
 인구·실질성장률의 기준은 2003년
 자료 : 경제산업성 자료(2006) 참고 작성

<그림 2-2>를 통해 일본과 동아시아와의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이 왜 동아시아 EPA 전략을 취하려 하는지 알 수 있다. 즉, 1999년에서 2004년까지의 EU 및 NAFTA에 대한 일본의 수출, 수입 및 직접투자의 변화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지만, 동아시아에 대한 변화율은 수출, 수입의 상승뿐만 아니라 직접투자의 변화율은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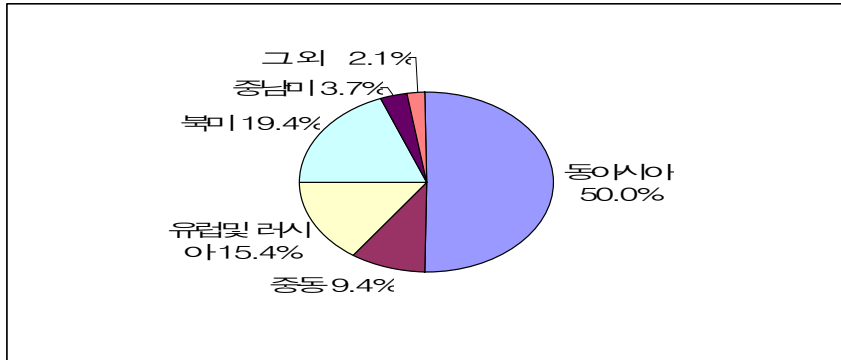
또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내 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의 영향으로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이는 역내 국제분업구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어 산업 내 무역을 촉발시키고, 동아시아지역을 하나의 생산 네트워크로 만들어 주었다. 일본 주도하의 직접투자의 급속한 증가는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의 견인역할을 해 왔는데, 1980년부터 2003년에 걸쳐 동아시아의 GDP는 4.8배 증가한 것에 비해 직접투자 유입은 26.1배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된 것이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고도화된 산업구조와 정보, 생화학, 다기능 매체, 의약 등 첨단기술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노동비용이 높다는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러 부문에서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EPA에 의해 일본경제가 활성화되어 기업을 강한 체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력, 개발력에 힘을 쏟고 있으며, 사업규모, 혹은 사업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수익기반이 약한 기술의 선행만으로는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행된 기술이나 혹은 개발한 기술로부터 얼마나 수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동아시아 EPA'라는 통일된 전략을 취하려 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이나 경쟁정책 등의 제도 역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일본이 EPA의 장점을 최대한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대는 동아시아지역이며,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와 경제적 연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을 갖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도 특히 중요하다.

또한 일본의 무역액에 접하는 동아시아의 비율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중에서도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 동아시아 역내 무역액 전체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일본의 총 무역액(수출+수입)은 122.6조엔(2005)으로 그 중 50%가 동아시아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각각 살펴보면 중국을 포함한 중화경제권이 25.9%, 한국 6.4%, ASEAN 13.3%, 인도 0.6%, 호주 3.3%, 뉴질랜드가 0.4%이다(그림 2-3 참고).

[그림 2-3] 일본의 무역액을 통해 본 동아시아의 중요성



자료 : 경제산업성 자료(2006) 참고 작성
 <표 2-2>는 일본의 상위 20위까지의 무역상대국을 나타낸 표로서, 이 표를 살펴보면 동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위안의 7개 국가가 동아시아 국가이다. 무역액 역시 동아시아와의 수출입이 전체의 약 5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의 경제규모는 장기적으로는 EU, NAFTA를 능가하는 대규모 경제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표 2-2] 일본의 상위 20위까지의 무역상대국

순위	국가명	무역액 (수출+수입) 단위: 억 엔	전체에 점하는 비율	순위	국가명	무역액 (수출+수입) 단위: 억 엔	전체에 점하는 비율
1	미국	204,941	18.6%	11	싱가포르	26,250	2.4%
2	중국	181,931	16.5%	12	아랍수장국연방	24,808	2.2%
3	한국	71,685	6.5%	13	사우디아라비아	23,927	2.2%
4	대만	63,469	5.7%	14	영국	23,395	2.1%
5	홍콩	40,066	3.6%	15	필리핀	19,303	1.7%
6	독일	38,958	3.5%	16	프랑스	18,056	1.6%
7	태국	37,174	3.4%	17	캐나다	17,356	1.6%
8	오스트레일리아	33,805	3.1%	18	네덜란드	16,623	1.5%
9	인도네시아	30,036	2.7%	19	이탈리아	14,439	1.3%
10	말레이시아	28,855	2.6%	20	이란	10,140	0.9%

자료 : 경제산업성 자료(2006) 참고 작성

3. '동아시아 EPA'의 구체적 전략 및 추진현황

1) 동아시아 EPA 의 구체적 전략

'동아시아 EPA'는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동아시아지역의

EPA에 대하여 앞으로 5년 정도의 로드맵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2-3>과 같다.

(1) 2006년 ~ 2007년의 과제

- ◆ 일·ASEAN EPA : ASEAN 전체와의 EPA는 2005년 4월부터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2007년 3월을 목표로 교섭을 종료한다.
- ◆ 2국간 EPA : 인도네시아와의 EPA는 현재 교섭 중, 베트남·브루나이와의 EPA는 정부 간 교섭 중, 인도와의 EPA는 2006년 6월까지 산학관 공동연구회 보고를 정리, 그 성과를 통해 교섭 검토, 호주와의 EPA는 2007년 3월까지 정부 간 공동연구 보고를 정리, 그 성과를 통해 교섭 가능성 검토, 한국과의 EPA 교섭은 현재 중단중이지만 조기재개 검토한다.
- ◆ 한중일 투자협정 : 한중일 투자협정은 현재 협의 중이지만, 조기 교섭과 높은 수준의 투자 제도를 정비한다.

(2) 2008년 ~ 2010년의 과제

- ◆ 동아시아 EPA : 2008년에 교섭을 개시하여 2010년을 목표로 교섭을 종료한다.
- ◆ 한·중·일 EPA 검토 : 한·중·일 투자협정을 조기에 정비하여 이를 전제로 한·중·일 3개국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EPA를 검토한다.

[표 2-3] 동아시아 EPA 구상의 로드맵

		~2006	2006~		2008~
ASEAN	2국간 협정	싱가포르(발효) 말레이시아(발효) 태국(합의) 필리핀(발효)	2국간협정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동아시아 EPA : 일·ASEAN 협정을 디딤돌로 포괄적인 EPA 체결
	지역 협정	ASEAN 전체와의 교섭	지역협정 일·ASEAN EPA 완성 디지털가전 등 전략산업을 포함한 무역자유화 공통투자 제도 책정 지적재산보호에 대해 공통목표 설정 2국간 높은 수준의 EPA 실현	2005.4→ 2007.3	ASEAN 및 한·중·일 + 호주·인도·뉴질랜드 등 총 16 개국을 멤버로 한다 관세삭감 외 투자, 지적재산,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포함 2010년 APEC 일본개최
한국·중국	한·일 EPA(04년 교섭중단)		한·일EPA 교섭 재개 위한 노력		한·중·일 EPA 검토 : 동아시아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의 EPA 협정 목표
	한중일 투자협정(교섭단계 협의 중)		투자협정 교섭 실시		
호주	2005년부터 공동연구	EPA 가능성 검토	확대 동아시아, 자원에너지 및 식량 안전확보의 차원에서 EPA 추진		
인도	2005년부터 공동연구	EPA 교섭 검토 (06~07)			

자료 : 경제산업성(2006)자료 참고 작성

일본은 2002년 11월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한 이후,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국과 EPA를 체결, 발효하였고 그 외 여러 나라와 교섭중에 있다⁴⁾. 그런 가운데 아시아 16개국으로 구성하는 ‘동아시아 EPA’ 전략을 기본틀로 하면서 양자 간 협상을 병행하여 아시아경제권 맹주를 노리는 중국과 대응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오해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는 일본의 행동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2002년 11월 ‘일·ASEAN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일본·ASEAN 포괄적 경제 연대구상』을 제안하고 각국 정상은 공동선언에 서명을 하였다. 이에 일본은 무역, 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환경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ASEAN 전체와 10년 이내에 EPA를 실현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2 국가 간 EPA도 진행하자는데 합의하였다. 경제산업성(2006)의 보고에 의하면 ASEAN 전체와의 협상과 ASEAN 각국과 개별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는 ASEAN의 선발·후발국가간 경제격차가 개별협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역내 공통현안에 대해서는

4)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에 이를 발효시켰으며, 한국과도 2002년 7월부터 본 협상의 전단계 조치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는데 합의하였으며, 2002년 11월 ASEAN과도 EPA 체결을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 지역주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는 것을 계기로 2002년을 ‘FTA의 원년(元年)’으로 규정하고 있다.

ASEAN 전체로 대응하여 협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거한다.

그동안 중국과 한국이 FTA 교섭 등으로 무역상대국과 관세철폐를 진행시키고 있어 수출 등에서 일본기업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각 나라와 처음부터 EPA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틀 안에서 협상하기 어려운 품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여 가능한 국가 순으로 빠른 체결을 도모할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관세 인하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이익이 목적이 아닌, 일본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 중장기적인 이익추구 등을 골자로 EPA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 전환을 통해 중국, 한국, 인도 등 아시아 각국과의 협정체결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으며, 농업 등의 민감한 분야에 대한 관세 인하를 피하면서 자동차 및 가전 등의 기간산업분야 품목을 수출하기 쉽도록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진행국 및 협상 체결의 후보국에는 아시아와 더불어 호주 등 농산품의 수출국이 많고,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 미숙한 자국산업을 지키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하여 투자규제를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농산품의 수출국에는 이점이 적은 협정이 되기 쉬워 일본의 전략대로 체결이 가속화할지는 불투명하다.

[표 2-4] EPA가 목표로 하는 내용

재화·서비스·인적 교류의 자유로운 이동의 확보	역내 관세 철폐	일본이 한층 더 시장개방을 하는 한편 ASEAN시장을 포함한 동아시아시장의 통합, 관세의 상호철폐 등을 실현
	원활한 재화의 이동	ASEAN광역형 물류인프라정비(ODA등의 활용), 통관간소화/전자화(IC태그)추진 등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서비스에 관련된 규제철폐, 투명성, 안전성 확보, 시장접근의 개선 등
	인적교류의 확대	간호사, 간호사(개호복지사) 등 특정자격을 가진 인재의 교류확충 및 수용, 비자수속 및 입관수속의 간소화, 연수제도 도입에 관한 인프라정비, 고도기술자에의 영주권 부여에 대한 검토 등
역내 경제활동의 원활화	투자규정의 정비·공통화	외자규제철폐 및 완화, 수속의 간소화 및 투명화, 접수리스크에 대한 해소, 분쟁해결수속의 정비 등
	제도의 조화 및 투명화	지적재산제도, 기준 및 규격, IT관련제도, 경쟁법, 사법제도 등의 협조 및 투명화, 수행능력 향상 등
안정성·지속적 발전	금융정책의 변화	통화위기대응지원을 확충하며, 엔화거래확대 및 바스켓통화의 검토, 자본거래의 자유화, 마크로정책의 조정 등
	그 외	동아시아에너지안전(긴급시 유통), 환경보전에 관한 협력

2) 추진현황

일본은 지금까지 정치·경제·역사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EPA 교섭을 추진해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2002년 11월 싱가포르와 EPA가 발효된 것을 시

작으로 2005년 4월에는 일본 최초로 농수산품을 포함한 본격적인 EPA인 멕시코와의 EPA가 발효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말레이시아와의 EPA를 서명하였다. 나아가 필리핀(2004. 4), 태국(2005. 9)과도 정상간에 대부분이 합의되었고, 인도네시아와는 교섭중에 있다. 또한 2005년 4월부터 ASEAN 전체와의 EPA 교섭에 들어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와도 2003년 10월에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2004년 11월 이래 교섭이 중단된 상태이다. 2006년 2월부터는 칠레와의 교섭을 개시하였고, 그 외 인도,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스위스와의 EPA를 염두에 둔 공동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이 지금까지 체결해 온 EPA는 무역·서비스분야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지적재산분야의 제도정비, 경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하자면, 무역자유화 분야에서는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등의 전략분야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상대국의 관세철폐 및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고 있다. 한편 일본측도 거의 모든 광공업품 관세 및 일부 농림수산물에 관련된 관세를 철폐하고 있으나, 민감한 품목에 대한 배려도 겸하고 있다(말레이시아와의 EPA에서는 자유화율이 말레이시아측 99.1%, 일본측이 94.1%였다). 또한 투자·서비스분야에서는 투자 후의 활동에 관한 내국민대우, 송금의 자유 등 투자보호에 관한 규율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분쟁처리수속을 포함하는 한편 투자자유화에 대해서는 현상유지에 대한 약속이나 일부 제조업관련 서비스의 자유화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심이다.

[표 2-5] 일본의 동아시아지역의 EPA 추진 현황

상대국	일본과의 교섭 내용
싱가포르	2001년 1월 교섭개시 2002년 1월 양국 정상 간(JSEPA) 협정서명 2002년 11월 일본 최초의 EPA 발효
말레이시아	2003년 12월 교섭개시합의 2005년 12월 양국 정상 간 협정에 서명, 농림수산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내용. 특히 자동차관세 등에 대해 말레이시아측의 대담한 양허. 2006년 7월 발효
필리핀	2002년 5월 아로요대통령 방일, FTA 제안 2003년 12월 교섭개시합의 2004년 11월 기본 합의 2005년 11월 양국 정상 간 기본합의 2006년 9월 서명. 이후 양국의 국내법상 수속을 완료하여 발효
태국	2001년 11월 탁신정권에 의해 일본에 FTA 제안, 정부 간 예비교섭 2003년 12월 교섭개시합의 2005년 9월 기본 합의 2006년 2월 기본 조문 확정

인도네시아	2005년 7월 EPA 교섭 시작 합의 2006년 2월 제3차 교섭 2006년 8월 제5차 교섭개최. 일본의 투자액은 ASEAN역내 최대. 천연가스, 광물자원 등 풍부한 자원국으로 경제개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005. 3월부터 2국간 협의 실시 (일-ASEAN 교섭과 동시 진행)
ASEAN 전체	2002년 11월 포괄적 경제협력안(CEP;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Plan) 제시 2003년 10월 양국 간 EPA 구상 체결 2005년 4월 교섭 개시(ASEAN 각국과 2국 간 교섭 동시 진행). 2005년 12월 일·ASEAN 정상회의에서 2년 이내에 교섭종료 의견 일치. 2006년 7/8월 제5회 교섭회합개최, 물품교역의 자유화교섭의 진행 방법 및 원산지규정, 투자·서비스와 협력에 관한 협의 2007년 1월 일·ASEAN 수뇌회담을 통해 타협에 관한 결의 재확인 2007년 11월에 개최되는 일·ASEAN 수뇌회담까지 교섭 타결 목표
한국	2003년 11월 교섭개시 2004년 11월 교섭 중단
인도	2005년 7월 공동연구회 개시 2006년 2월 제3차 공동연구 회합
호주	2002년 5월 정상회담에서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고위급 협의회 구축에 합의 2005년 9월 공동연구회 개시 2005년 11월 제1차 공동연구 회합

자료: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자료(2006) 참조 작성

[표2-6] 일본의 아시아 외 지역의 EPA 추진 현황

상대국	일본과의 교섭 내용
멕시코	2002년 10월 교섭 개시 2003년 10월 농업부문에 대한 양국간 의견차이로 체결 지연 2005년 4월 EPA 발효
칠레	2000년 2월 칠레의 제안으로 JETRO와 공동연구개시 2001년 6월 결과보고 및 양국간 EPA 조기체결 제안 2005년 11월 교섭 시작 합의 2006년 2월 제1차 교섭
스위스	2005년 11월 제1차 공동연구 회합

자료: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자료(2006) 참조 작성

Ⅲ. EPA 전략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책

일본은 그동안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온 농업 및 일부 광공업 제품의 관세철폐에 대한 부담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FTA보다 포괄적인 EPA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일본이 동아시아 각국과 EPA 협상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개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만이 동아시아에서 고립될 위험성이 있어 '동아시아 EPA' 전략이 제대로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물론 일본정부를 중심으로 통상당국과 외교당국이 일본의 '동아시아 EPA'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는 있으나, 미국의 NAFTA, 독일과 프랑스의 EU보다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약한 편이어서 일본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란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중국과 우리나라가 ASEAN 및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일본보다 앞설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흐름속에 일본의 '동아시아 EPA' 전략에 따르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출산·고령화 문제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바로 노동인구의 부족현상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아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사회인 일본이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부문과 노동력에 대한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이해를 도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된다고 볼 때 아시아에서 유입될 노동자를 통해 경제효율성과 활성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아시아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이 일본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은 결여되어 있다. 즉 일본인들은 아시아로부터 일본에 유입되어 온 많은 노동자들이 일본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일본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일본이 아시아로부터 인적자본을 받

아들여 이를 일본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으로 이끌겠다는 인식을 갖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에서 분업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상호 의존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공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문제

일본은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자동차, 전자, 전기, 기계산업 등은 일본의 EPA 교섭에 찬성하지만, 국내 생산비용이 높은 농수산물 등의 1차 산업은 아직 개방시기를 놓고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 개방 등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의 의견조정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 및 노동력 유입에 대해 일본 내 이해대립이 쉽게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산물시장개방은 일본 농민들과 정치권 반발이 커 '동아시아 EPA' 전략이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진전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본이 그동안 금기시 해온 노동시장과 더불어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적극 표현하는 단체도 있다⁵⁾. 이렇듯 일본이 EPA를 추진하고자 하는 상대국은 일본의 농업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업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과 농어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치가들의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반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일FTA 체결이 2004년 11월 제6차 협상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 역시 농수산물 분야에서 일본측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를 제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업은 식량안전보장이라는 의미 외에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일본은 지금까지 농산물 시장개방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는데,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나 그만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일본 농업중사자의 고령화 및 후속자 부족, 농지 황폐 등에 대응하여 강한 농업을 확립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농업부문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아도 어차피 경쟁력이 없어 버티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농가의 대안작물 위주의 전환을 통해 농작물 생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일본의 농업이나 농산물 무역, 국내 구조개혁에 대한 대응 등을 내외에 효과적으로 발언하여 상호 국내사정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야 한다.

일본은 지금껏 자국이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가라는 점 때문에 2010년까지 자국의 농산물 자급도를 4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WTO 협상결과에

5) 예를 들어 2006년 12월 초 동경시내에서는 전국농업협동조합 대표자 회의가 열린 후 호주와의 EPA협상에 반대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따라 농산물 개방 정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ASEAN과의 EPA 체결을 앞두고 농업의 기업화, 농업 지원확충 등 신규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앞으로 EPA 교섭을 촉진하고 일본 국익에 맞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화라는 시각을 근거로 농업계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농업구조개혁의 움직임을 지원하고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시장의 개방이나 산업구조의 효율화, 산업비용의 지속적 저하를 초래하는 경제구조개혁을 중장기에 걸쳐 실행하는 확고한 의지가 요구된다.

3. 동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문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자체는 국제정치의 틀의 변경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3개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국가간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이고 상호간 입장차이가 분명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 등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활성화를 막는 장애물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내정치적 요인과 국제정치적 요인이 얽여져 있다. 국내정치적 요인으로는 각국의 민감한 산업에 대하여 경쟁력이 낮은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국제정치적 요인으로는 과거사 문제 및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관계가 한·중·일 3개국의 경제적 통합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국제정치의 가장 큰 변수인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더욱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ASEAN이 성립되기 직후부터,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1970년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ODA(정부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 아시아에의 경제원조와 경제협력에 상당한 공헌을 해 왔다. 일본은 그간의 ODA를 바탕으로 EPA 교섭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일본의 對 아시아 통상정책이 대부분 ODA를 통한 기술협력과 자금지원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고, 이를 통해 아시아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 전력의 약 10%가 일본의 ODA 프로젝트로 만들어졌고 아세안국가들의 인프라정비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나아가 아시아지역에의 경제적 공헌도를 측정하는 지표(공헌도지표)는 일본이 ODA 분야에서 제1위, 전체에서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ODA 공여액 누계는 아시아에 대한 전 세계 공여액의 약 1/3에 해당한다. 일본이 아시아에 대해 ODA를 제공하고 동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했던 것은 일본이 추구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EPA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3-1] 국가별 ODA금액 순위

(단위 : 100만 달러)

	1	2	3	4	5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EU	영국
	759.7	152.2	74.3	55.4	47.4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1141.8	210.9	91.1	86.5	76.9
말레이시아	일본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79.2	10.1	6.3	5.4	3.5
필리핀	일본	미국	호주	독일	스페인
	528.8	55.3	32.1	27.8	25.8
태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	EU
	1002.2	27.8	27.1	13.0	12.5
베트남	국제개발협회	일본	ADB특별기금	프랑스	덴마크
	566.2	484.2	233.7	99.0	69.8
미얀마	일본	영국	EU	유니세프	그 외
	43.1	11.1	10.6	7.2	6.7
라오스	일본	ADB특별기금	국제개발협회	스웨덴	프랑스
	86.0	47.6	41.6	22.7	18.5
캄보디아	일본	ADB특별기금	국제개발협회	미국	프랑스
	125.9	74.1	62.6	51.2	25.8

자료 : 社団法人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2005)

원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그에 상응할 만큼의 충분한 이해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침략전쟁과 그에 따른 역사인식의 차이가 타 동아시아와 철저히 달라 동아시아 각국 간 상호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역사적·문화적으로도 2천년 이상의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한·중·일의 중요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유와 경제적 이익보다, 불과 150여년의 교류 역사를 맺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도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와 뿌리깊은 의구심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ASEAN과의 EPA 교섭은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개별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2010년 전후로 ASEAN+한국, ASEAN+일본, ASEAN+중국,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지는 자유무역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ASEAN+3’의 주도적 역할이 ASEAN인 것처럼 ‘ASEAN+1’의 협력체제가 제도화되면 이 역시 ASEAN에게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금 당장 ASEAN과의 어떠한 협력체제라 하더라도 ASEAN이 주도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큰 요인은 현재 한·중·일 3개국간의 정치적 불신감이라 할 수 있다. 3개국 간의 역사인식과 국제적 감각, 그리고 장래에 대한 비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아시아경제권, 혹은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북아 3국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동아시아 EPA 추진에 필요한 속도문제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라는 흐름 속에서 일본만이 EPA를 고집할 경우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발언이 자민당과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단련(經團連)은 EPA 추진에 따른 일본기업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우려해 FTA 추진을 도입하지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자민당도 2007년의 참의원선거를 위해 진행속도가 느린 EPA보다는 속도감 있는 FTA를 지지할지도 모르는 입장에 놓여있다.

일본은 현재 약 4개국과 EPA를 체결하였고, 그 외 여러 나라와 교섭중에 있지만 EPA를 위주로 FTA를 추진하고 있어 관세의 상호철폐만이 아니라 분쟁해결절차나 지적재산권제도의 정비 등으로 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먼저 ASEAN과의 교섭을 일단락한 시점에서 일본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EPA를 계속하여 고집할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 일본은 타국과의 경쟁의식을 부정하고는 있으나, 속도를 중시하는 흐름에서 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초조감이 없지 않아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WTO가맹에 의해 시장경제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 일본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면 일본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본이 경제대국에 버금가는 정치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 할 터인데, 동아시아 주변국가로부터 정치적인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ASEAN+3'은 물론 일본이 기대하는 '동아시아 EPA'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IV. 시사점 및 대응

1. EPA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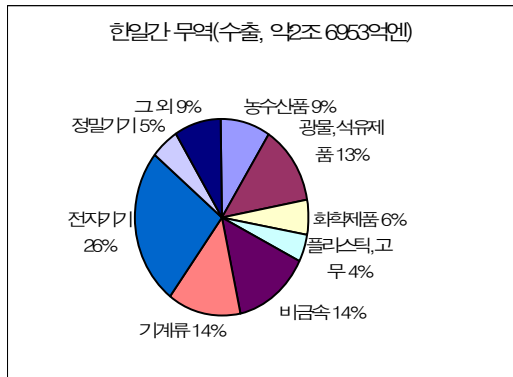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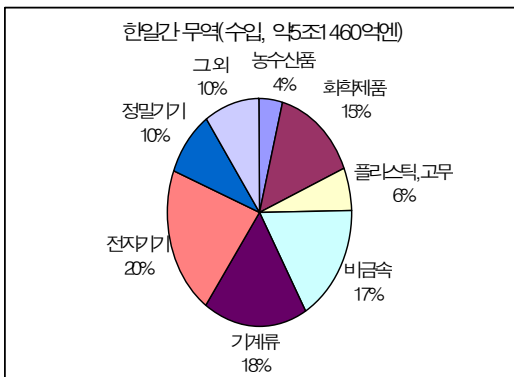
2006년 하반기 들어와 한국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개방압력에 따른 위기감과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한미 FTA, 한일 FTA 등 협상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전면적인 무역개방 및 경제개방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까지 생각한다면 지금의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속에 일본의 '동아시아 EPA' 전략을 먼 산 바라보듯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해 현명하고도 냉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파악에 근거한 슬기롭고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원래 일본의 EPA 상대국의 첫 번째 후보는 한국이었다6). 한국은 일본의 인접국으로서 정치적 중요성,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상호신뢰관계,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존재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규모면에서도 대만이나 홍콩과는 다르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도 다르고 동아시아 역내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주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뿐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도 기대가 적지 않다. 渡辺(2005)에 의하면 1998년 11월 멕시코가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FTA체결을 타진해 왔을 때도 일본정부는 ‘2국간 투자협정’을 대체제안으로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역시 첫 EPA 대상을 한국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 양국은 산업구조가 비교적 비슷하기 때문에 EPA를 체결할 경우 시장의 일체화를 통해 양국 산업이 경쟁과 협력, 나아가 경제구조개혁을 한층 진전시켜 양국의 생산성·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동반자 관계에 있다. 또한 현재는 비교적 간단한 관계에 머물러 있는 투자관계의 발전 등 양국의 경제관계의 잠재적인 능력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 의의가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간의 경제통합효과는 커진다. 왜냐하면 양국의 무역관계에서 수송비가 적게 들고 EPA/FTA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므로 한국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거래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 한일 간 경제관계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2006)

6) 일본의 EPA 체결대상국 중 일본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 역시 한국이다. 한국과의 EPA 교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체기업의 약 40% 가량으로 싱가포르 35%, 멕시코 13%, 캐나다 10% 보다 월등히 높았다(박범순 외; 2003)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 중의 하나이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 그리고 조립가공제품의 대 세계수출이라는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의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림 4-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국은 상호 유사한 상품을 수출하면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일본으로부터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 가공하는 무역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한일 간 무역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5년 동안 68%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등 착실하게 확대되고는 있지만, 한국측의 만성적인 적자는 2005년도 역시 243억 달러의 적자폭을 보였고 2006년도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최근 한일 EPA 교섭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 일본의 METI(經濟産業省) 등이 있으나 이는 일본의 시각에서 논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KIEP(2001)의 연구결과 수출이 41~52억 달러, 수입이 64~8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2002)의 경우는 수출 1.1억 달러, 수입 4.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이창재 외(2005)에 의하면 동북아 3개국의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⁷⁾. 그러나 한국은 자본과 기술집약형 산업을 중점 육성, 발전시켜 오면서 자동차와 같은 중간기술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나, 천연자원의 부족과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의 해외이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보다는 규모가 작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일본이 '동아시아 EPA' 전략을 추진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유의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의견과 회원국들 간의 정치·경제·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및 APEC 21개 회원국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구상으로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태지역 자유무역체(FTAAP) 등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이러한 일본의 장기적 국가전략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동아시아시장에 있어서의 불투명한 지역주의 및 다자주의에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은 고도의 부품소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중급의 부품소재 및 완제품 조립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기업 사이에서 전반적인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이형오, 2006)가 있기 때문에 한일 EPA 교섭은 한국에게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상호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저가 제품과 경쟁이 불가피한 점에 비추어 일본과 같은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일 EPA 교섭이 재개될 경우 일본의

7)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중·일 FTA로 인한 GDP성장률은 한국 5.14%, 중국 1.54%, 일본 1.21%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한·중 FTA와 한·일 FTA의 파급효과를 합친 것보다도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감품목인 농수산물과 한국의 민감품목인 중소부품 소재산업의 양허수준에 대하여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은 교착상태에 있는 EPA 재개를 위해 학계 및 재계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역시 성실한 자세로 임해 대화채널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해 주도권다툼으로 보이는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중재자·조정자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한일 FTA협상은 <표 4-1>에서와 같이 단순히 관세철폐 및 경제적인 효과만으로 그 의의를 국한할 수는 없다. 즉 정치·경제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포괄적인 틀을 확립하여 동아시아 EPA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국은 일본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큰 데다 양국간 이해 상충 부분이 적어 현안 정리를 위한 연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한국과의 대화폭을 넓혀 인접국가로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협상속도 뿐만이 아니라 양국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EPA 협상 추진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 단계이다.

현재 한국은 FTA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다. FTA로 인해 산업의 공동화, 산업도태, 농업황폐 및 사회적 병폐를 불러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발생할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해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1] 한국과의 EPA 의의

동아시아 EPA 모델	선진국인 한일 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근거한 동아시아 EPA 모델 구축
양국의 경쟁력 향상	시장의 일체화를 통해 양국기업이 국경을 초월하는 경쟁과 협력, 나아가 경제구조개혁을 한층 진전시켜 양국의 경쟁력을 향상
양국 경제잠재력 개발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의 잠재력을 현재화(顯在化)시킬 수 있는 모델개발
양국관계 개선	한·일 양국의 더욱 긴밀한 관계 형성

2. EPA에 따른 동아시아의 경제적 효과

동아시아의 성장에 대한 견인역할을 해 온 직접투자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EPA 경제효과는 일본과 ASEAN에서 EPA를 체결할 경우 일본 GDP는 약 1.3조 엔(체결국 전체 약 6조 엔) 상승효과가 있고, ASEAN+3에서 EPA를 체결할 경우 약 4.2조엔(체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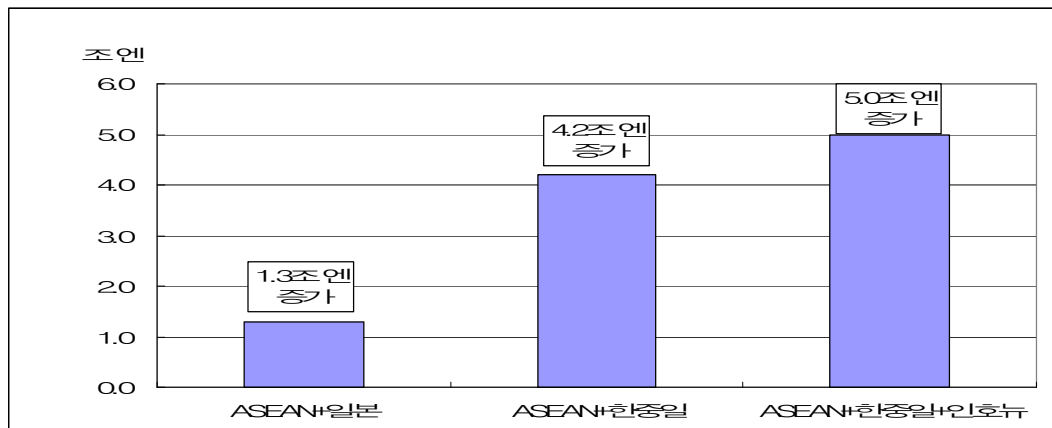
전체 약 20조엔), ASEAN+ 3+ 3으로 체결될 경우에는 약 5조엔(체결국 전체 약 25조엔)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한다(일본 경제산업성, 2006, 川崎研一, 내각부경제사회총합연구소 특별연구원에 의한 계산). 이러한 GDP 상승효과 외에 기업경영의 효율화 등에 의한 기업수익의 개선, 경제활성화 효과 등이 기대되며, 이런 것들이 상호 영향을 주어 경제효과가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4-2] EPA에 의한 일본의 경제효과

	전부분 자유화		그 중 서비스 부분 자유화	
	100만 달러	%(GDP)	100만 달러	%(GDP)
일·싱가포르 EPA	4,996	0.09	4,385	0.08
일·인도네시아 EPA	10,730	0.20	3,589	0.07
일·말레이시아 EPA	10,478	0.19	2,884	0.05
일·필리핀 EPA	6,840	0.13	2,201	0.04
일·태국 EPA	19,458	0.36	4,256	0.08
일·ASEAN EPA	52,727	0.97	18,275	0.34
다각적무역자유화(WTO)	401,806	7.40	189,667	3.49

자료 : 清田(2006)

[그림 4-2] 동아시아 EPA의 경제적 효과



자료 : 川崎研一(2006)

V. 결 론

오늘날 지역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추세는 WTO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급증하였

으며 세계 각국이 규모의 대소와 상관없이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지역통합을 통한 교역과 개방은 반드시 필요하며,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단순히 적응하는 정도가 아닌 변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동북아는 세계 주요경제지역 중 지역차원의 지역무역협정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동북아 3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강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때 동아시아지역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한·중·일 3개국이 공동으로, 혹은 어느 한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역사인식 등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앞으로 EU, NAFTA에 필적할 만한 지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일본이 인도, 호주 등을 ‘동아시아 EPA’ 전략에 포함시키고 양자 간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는 대응력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는 아시아경제권에서 영향력이 커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10억 명의 인구대국인 인도와, 천연자원과 농산물이 풍부한 호주를 끌어들이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에서도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다. 더군다나 북핵문제로 인한 6자회담의 결과는 동아시아지역의 안보 및 평화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일본의 ‘동아시아 EPA’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PA에의 대응의 성공여부는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일본의 입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한 경제사회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신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나라 역시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작, 김기석편. 2006.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
 신용대. 2004. 「동북아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로드맵」 산업연구원
 왕윤중. 2001.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향후과제」 『KIEP 동향분석속보』 01-09호
 이요한. 2003. 「동아시아 협력 이론의 분석과 적용」 『동남아시아연구』 13권 1호
 이형오 외. 2006. 「미래지향적 한일기업간 협력방향과 대응전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보고서

정인교. 200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진창수 편. 2005. 『1990년대 구조불황과 일본경제시스템의 변화』 한울아카데미
한국은행. 2003 a), 「한·중·일 FTA설립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CGE분석방법」 BOK최
신자료
한국은행. 2003 c),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의 수출입구조 비교분석과 향후과제」 BOK
발간자료(#173)
현진덕. (2003. 「동북아 경제통합과 제도화과정에 있어서의 일본의 정책」 『평화연구』 제
11권 4호, pp81-111

浦田秀次郎・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編. 2002. 『日本のFTA戦略』日本經濟新聞社
姜尙中編. 2003. 『日米關係からの自立—9・11からイラク・北朝鮮危機まで』藤原書店
外務省經濟局. 2006. 『日本の經濟連携協定交渉；現状と課題』
經濟産業省. 2006. 「經濟連携協定(EPA)について」
經濟産業省. 2004. 「經濟連携の取組状況について」
經濟産業省. 2006. 「グローバル經濟戰略」
經団連. 2000. 「自由貿易協定の積極的な推進を望む」
清田. 2006. 「日本の二國間・地域的自由貿易協定と多核的貿易自由化の効果：ミシガンモデ
ルによる分析」獨立行政法人經濟産業研究所
東アジア共同体評議會政策報告書. 2005.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現状、背景と日本の國家戰
略』
渡辺利夫. 2004. 『東アジア經濟連携の時代』東洋經濟新報社
渡辺利夫編著. 2004. 『東アジア市場統合への道—FTAへの課題と挑戦』勁草書房

Ogita, Tatsushi. 2002. "An Approach towards Japan's FTA Policy" *APEC Study Center*, IDE-JETRO

Ogita, Tatsushi. 2003. "Japan as a Late-coming FTA Holder: Trade Policy Change for Asian Orientation?", Chapter 8 in *Whither Free Agreements?: Proliferation, Evaluation and Multilateralization*, ed. Jiro Okamoto, Chib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각년호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각년호

Abstract

Japan's EPA Strategy for East Asia Region and Implications

Kang, Cheol-Gu*

In the course of active development of an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apan announced the 'East Asian EPA' including sixteen countries such as ASENAN, Korea, China, Australia, New Zealand, India (ASEAN+6) in early 2006.

The Japan's EPA strategy aims at enhancing its political and economical voice by building up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beneficial to Japan as well as maintaining its control over the East Asian region which is now emerging as a gigantic economic zone. However, taking into account such matters as Japan's excessive awareness of it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U.S., the general thinking of Japanese elites that they are not Asian, but they want to get into the culture of Western, historical issues, its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it is dominant that Japan does not have the control over East Asian region as a leader countr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that the 'East Asian EPA' strategy achieves great success, a gigantic economic zone, which encompasses almost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amounts to a quarter of the world GDP equivalent to nine trillion dollars, will be born. Korea geopolitically located midway between Japan and China should carefully cope with how the 'East Asian EPA' strategy develops and changes.

That is, the negative recognition that an EPA or a FTA can cause deindustrialization, the agricultural devastation and social evils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national sympathy should be simultaneously formed to get rid of the feeling of unrest by making people focus on the positive effects generate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In addition, Korea should suggest specific alternatives in the perspective of an arbitrator or a conciliator without being fettered by interests with Japan and China at the point of time when Korea and the U.S. concluded a free trade agreement.

In particular, since Korea and Japan have similarities in the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build its own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the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economic integr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in the long-term perspective at the point of time when Korea has suspended free trade talks with Japan.

■ 논문접수일 : 2007년 10월 26, 논문심사일 : 2007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07년 11월 22일